

2026

자치현안 정책포커스

”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정부부처 정책동향

1.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03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04
3.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05
4. 인구감소지역 여행 필수품,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지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07
5.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전문인력 100명 양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08
6.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로 현장 대응력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
7.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10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충분한가?(국회입법조사처) 14
2.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농자재 수급 영향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3.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한국환경연구원) 17
4.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8
5.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 구축 및 적용 20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6-08호

I

정부부처 정책동향

농림축산식품부

1.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원문
바로가기

주민공동체와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을 5개 지자체와 최초로 체결

-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 근거하여,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을 최초로 체결
-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 사회적농장 등 지역 주민 주체가 협력하여 마을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체결하는 제도로, 전남 해남군('26.7.)을 시작으로 전북 김제시·진안군·고창군, 충남 당진시 등 5개 지자체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체결을 완료할 예정
-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는 안부 확인, 먹거리·이불빨래 나눔, 찾아가는 건강관리·방문미용·이동편의 등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사업, 인프라를 행·재정적으로 지원
-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복지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해 연내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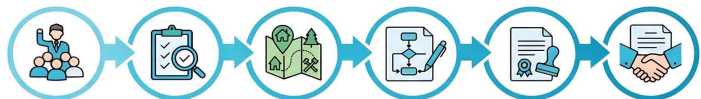
농촌의 서비스 결핍을 해소하는 민·관 협력 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이란?



주민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협약 추진 6단계 프로세스



주민 조직 수요 조사 자원 파악 계획 수립 계획 확정 협약 체결

5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현황

지역	주요 서비스 내용		공급 주체
해남	☎ 안부 확인, 📍 마을 행사 지원	안부 확인, 마을 행사 지원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단체
김제	🍞 빵 나눔, 🏠 노인 건강관리, ✂️ 방문 미용	빵 나눔, 노인 건강관리, 방문 미용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단체
당진	🚗 이동 편의, 🏠 주거 안전 개선, ❤️ 정서 지원	이동 편의, 주거 안전 개선, 정서 지원	우강면 주민자치회 등 18개 단체
진안	🧺 이불 빨래, 🍲 밥상 나눔, 📖 교육·문화	이불 빨래, 밥상 나눔, 교육·문화	동구나무아래농조합 등 8개 단체
고창	🚶 순회형 건강 체조, 📖 정서 돌봄	순회형 건강 체조, 정서 돌봄	성봉회, 별과소나무협동조합

NotebookLM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체계 개편과 전면적 재정 투입 추진

- 불법사금융 피해 긴급의료체계 신설, 소액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 24시간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 응급·분만의료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통합돌봄 대상의 장애인·정신질환자 확대,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및 자립 주거 지원
-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집중 지원 개편, 부부감액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민연금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ESG 책임투자 확대
- 청년층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검토, 가족돌봄·고립청년 전국 단위 지원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2조 원) 신설, 지역수가 개편, 지역의사제 및 지역 의대 신설 추진
- 바이오헬스 메가펀드(1조 원) 조성,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 및 의료·임상 데이터 개방, 의료영상 공유시스템 구축, AI·로봇 기반 돌봄 혁신
- 가짜진료 및 건강보험 거짓청구 엄단,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산후조리원 예약금 피해 방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최대 20개)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7대 핵심 추진과제

2026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7가지 핵심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한다.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금융위기가구 신속 포착 및 소액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합니다.
	국가책임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안착시키고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을 확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과 국민연금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으로 공정성을 높입니다.
	청년 도약 복지	청년층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5극·3특 지역의료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1.2조 원) 및 국립대병원 육성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바이오헬스 1조 원 메가펀드 조성 및 AI를 활용한 의료·돌봄 혁신(AI)을 가속화합니다.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가짜진료 및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최근 1년('25.5~'26.4)
폐업 경험 소상공인 1,500명 전화조사('26.5)

- 폐업의 주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이 압도적이며, 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와 원재료·바인건·고정비 상승이 복합 작용
- 폐업자의 64.4%가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한 시점에 폐업을 결심하였고, 결심 당시 68.5%가 평균 8,531만원의 부채를 보유(고연령층일수록 부채 규모 확대)
-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7.7개월이 소요되며,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25.10) 발표 이후 소요기간이 16개월에서 7.7개월로 단축
- 폐업 시 가장 큰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이어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 권리금 회수'(30.7%) 順이며, 권리금 회수율은 31.5%(평균 421.7만원)에 불과
-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원이 소요되고 점포정리 비용(559만원, 43.5%)이 최대 비중이며, 비용 마련은 자체 보유자금(49.7%) 의존도가 높음

구분	주요 결과	비고
폐업 이유 1위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70.9%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 62.5%
폐업 결심 매출감소 기준	40~60% 감소 시 39.1%(최다)	40% 이상 감소 시 결심 64.4%
부채 보유율·평균액	68.5% 보유, 평균 8,531만원	60대 이상 9,879만원으로 최고
폐업 소요기간	평균 7.7개월	'25.10 대책 이후 16→7.7개월 단축
폐업 시 애로 1위	대출금 상환 45.5%	폐업 시점 결정 37.3% 順
폐업 비용	평균 1,286만원	점포정리비 559만원(43.5%) 최다
권리금 회수율	31.5%(평균 421.7만원 회수)	지불 권리금 평균 1,336.8만원
정부지원 이용	희망리턴패키지 75.5%	미이용 사유: 제도 미인지 66.4%
폐업 후 현재상태	취업(준비) 41.4%	재창업(준비) 26.9%, 활동포기 29.3%

I 정부부처 주요정책

-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75.5%) 이용이 압도적 1순위이나, 미이용자의 66.4%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여 홍보·안내 강화 필요성 확인
- 폐업 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을 최대 애로로 꼽았고, 현재상태는 '취업(준비 포함)' 41.4%로 재창업(26.9%)보다 안정적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
- 정량통계와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폐업의 근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일관되게 확인되며, 특히 소매업·음식업 등 생활밀착 업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장기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로 응답자의 47.3%가 '폐업 비용 지원'을, 38.8%가 '재창업·취업 지원'을 꼽은 만큼, 점포정리비·권리금 회수 등 폐업 국면의 실질 비용을 낮추는 정책 설계가 요구됨
- 정부 지원제도 미이용 사유의 66.4%가 '정보 부족'인 점을 감안할 때, 폐업 예정·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안내체계(지역 상공회의소·소진공 연계 등) 구축이 시급
- 전북자치도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예방(경영개선·재기 컨설팅) 단계부터 폐업 이후 재취업·재창업 연계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

문화체육
관광부

4. 인구감소지역 여행 필수품,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지역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확대

- 26년 6월 8일부터 '디지털관광주민증' 서비스에 전북 순창군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신규 참여하면서, 운영 지역이 기존 44개에서 총 52개로 기초지방정부로 크게 확대됨
- 이번 지역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1,400여 곳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에서는 발효테마파크 30% 할인, 썬웨이 어드벤처 글램핑 30%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
-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타필드 수원 반짝매장 홍보 및 안동 지역 축제 연계 행사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1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연 번	지자체명(선정시기)	주요 연계 관광지 및 혜택
1	순창군(2026년 신규)	순창발효테마파크 입장료 20% 할인, 강천산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 할인, 발효·미식·체험·숙박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2	김제시(2025년 신규)	꽃다비팜(치유농장): 정원 산책 및 체험 10%할인, 팔봉동예: 도자기 체험, 농촌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공유 공간 활용 중심
3	무주군(2024년)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사계절 썰매장 등 주요 시설 이용료 30% 할인, 자연 및 생태 관람 시설 위주의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4	임실군(2024년)	임실치즈테마파크: 서바이벌 게임장 등 혜택, 관내 다수 로컬 사업장(카페, 숙박, 식음료) 연계, 테마파크 중심 거점 활용 및 전방위적 지역 상권 연계
5	고창군(기존 선정)	고창해변승마클럽 취게팜: 체험승마 20% 할인,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20% 할인, 석정휴스파, 책마을해리 등 혜택, 온천, 캠핑, 승마 등 레저·휴양 및 문화 관광 복합 연계
6	남원시(기존 선정)	춘향테마파크 및 광한루원 일대, 화인당: 한복 날개 대여료 50% 할인 등 전통문화 거점 및 구도심 상권 가맹점 광범위 연계

문화체육
관광부

5.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전문인력 100명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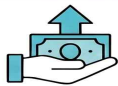


2026 전북 관광기업 인력지원사업: 인건비 지원과 정규를 연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업계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8개권역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총 100명(전북 20명 등) 규모의 '2026년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함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관광기업 20개사를 공모하였으며, 평가를 거쳐 파OO 등 총 19개사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함
-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인턴 채용 시 최대3개월간 최저임금 기준인 월 2,156,880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실무수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0만 원씩 3개월간 총 180만 원의 고용유지 특전(인센티브)이 추가 지원됨
- 최종 선정기업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북 거주자(또는 이전 가능자)를 대상으로 자체 인턴 모집을 진행하며, 채용된 인턴은 3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관광 실무 맞춤형 직무교육 및 컨설팅(총 3회 내외)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업 인력지원사업 안내

전북 관광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 및 채용 혜택을 한눈에 파악한다.



인턴 인건비 월 216만 원 지원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를 최대 3개월간 전액에 가깝게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180만 원 인센티브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3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및 실무 직무 교육

온·오프라인 역량 강화 교육과 전담 멘토를 통해 실무형 인재로 육성합니다.



7월 21일부터 기업별 인턴 모집

7월 말까지 인턴 모집 및 확정 후, 8월부터 3개월간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로 현장 대응력 강화

원문
바로가기

AI·웨어러블·재난안전통신망 연계하여 재난현장 핵심정보 실시간 제공 및 대응인력 장비 휴대 부담 완화

- 과기정통부·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을 위한 신규 연구 과제를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재난현장 대응인력에게 핵심정보를 실시간 제공
- AI가 무전 내용을 분석·요약해 주요 지시사항과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 심박수, 피부온도,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연구기관을 공모해 2년간 9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AI와 웨어러블 기술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 개요



연구기간
2년
(2026~2027년)



연구비 지원
9억원 내외



연구기관 공모
8.7.(금) ~ 9.7.(월)



연구성과 목표
스마트 현장 재난 대응
혁신제품 개발·공급



과학기술로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스마트 기술이 생명을 지킵니다!



교육부

7.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원문
바로가기

AI 대전환 시대의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여 교과 연계 독서와 생애 주기별 독서 집중학년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및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학생을 '주도적 독자'로 육성

- 스마트폰 노출에 따른 팝콘브레인 및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판적 읽기·인문학적 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청소년 독서 지표 전반이 하락하고 한국 학생의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이 25.6%(OECD 평균 47.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존 정책의 흥미 위주 운영 및 비독(非讀) 학생 맞춤 지원 부족, 사서교사 배치율 저조(16.47%), 독서교육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독서교육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



AI 시대, 비판적 읽기 역량의 결여



한국 학생의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은 25.6%로 OECD 평균(47.4%)에 크게 미달합니다.



디지털 과의존 '팝콘브레인' 예방



스마트폰 등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를 깨우기 위해 느린 자극인 독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독서 체계 부족

기존 독서 정책은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되어, 수업 내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미흡했습니다.

I 정부부처 주요정책

○ 4대 핵심 추진 과제

- (수업과 연계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교과 수업과 독서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수업 속 독서교육을 일상화
-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및 맞춤형 진단) 초3~4·중1·고1을 독서 집중학년으로 운영하고, 학생별 독서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독서교육을 지원
- (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인프라 강화)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AI·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과 학교도서관·전문인력을 확충
- (법·제도적 기반 강화)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예산·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핵심 추진 과제



독서 곤란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맞춤형 독서역량 함양을 지원합니다.

추진 과제	세부 내용
1. 수업 연계 독서 일상화 	교과 연계 독서수업 모델 발굴 및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2. 독서교육 집중 학년제 	초3~4(학습독서), 중1(사회적 독서), 고1(진로독서) 집중 지원
3. 학교 독서 지원 강화 	'독서로' 플랫폼 고도화, 사서교사 배치 확대,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4. 법·제도적 기반 구축 	「교육기본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 명시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국회입법
조사처

1.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충분한가?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안 제시

- '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1년 401만 명→'25년 563만 명(전체 운전자의 16.1%)으로 증가
-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지속 증가하여,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이 '21년 15.7%→'25년 23.7%로 확대
- 고령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가 교통카드·지역화폐 등 인센티브(10~50만 원 상당)를 제공하는 정책이나, 최근 5년간 반납률이 2%대 초중반에 정체되어 실효성 논란
- 장롱면허 소지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아, 운전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반납에 참여하지 않는 역선택 문제 발생
- 농업인 면허소지자의 94.8%가 생업·대중교통 부족을 이유로 반납 의향 없음(한국 농촌경제연구원),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도 20.6만 명(운수업 종사자의 약 25%)으로 생계형 반납이 현실적으로 곤란
- '면허 완전 유지' 또는 '면허 완전 취소' 뿐인 이분법적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생활상 면허가 필요한 고령자는 자진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움

연도	고령 면허소지자	자진반납자	반납률
2021	4,016,538명	83,997명	2.09%
2023	4,747,426명	112,896명	2.38%
2025	5,632,818명	141,286명	2.51%

●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능력에 따라 시간·장소·속도·차량(안전장치 장착 여부) 등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지 아니면 취소'의 이분법을 보완할 수 있음
- 국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80조의2에 신체장애·음주운전 관련 조건부 면허 근거만 있을 뿐 고령자 대상 규정은 부재하며, 정부는 '26~'27년 '운전능력진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 기반을 마련 중
- 해외 사례는 크게 두 방식으로 구분
 - (미국·호주) 운행조건 제한형 : 주간운전·자택 반경 등 시간·장소·거리를 제한
호주는 정기 진단과 의사 건강증명서를 조건에 연계
 - (일본) 차량기술 연계형 : '22년 도입된 '서포트카 한정면허'로,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 허용
-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차주행평가를 포함한 운전능력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요응답형교통(DRT)·공공형 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확충으로 면허 조건부화에 따른 이동권 공백 보완, 특히 농어촌 지역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수요응답형 모델 우선 검토 필요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연계형 조건부 면허 도입 시 장치 설치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 방지 필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농자재 수급 영향과 시사점



미·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자재 공급망 타격에 대비한 품목별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

- 2026년 2월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별 유조선 통항 수가 급감(평균 60척→3척)함에 따라 국제 유가(+44.6%), 아시안 LNG(+75% 이상), 요소 가격(+81.5%)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
- 국내 수입물가 역시 원유와 나프타를 중심으로 급상승하여 농가 영농비와 멀칭비닐 등 농자재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LNG와 요소 등도 장기 계약 및 통관 시차를 두고 향후 국내에 본격 반영될 위험이 존재함. 곡물 부문은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나 중장기적 가격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따라서 원유·나프타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 경영안정 지원, 비축유 활용, 할당관세 등 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가격 상승 폭이 큰 요소·암모니아 등 비료 원료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가격 안정 지원 및 중장기적 국산 대체 기반 확충을 추진해야 함.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과 농자재 수급 비상’

미·이란 전쟁발 원자재 위기, 품목별 선제적 대응 필수

구분	핵심 현황	대응 전략
물류 위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항 95% 급감 60척 (Daily Avg.) 3척 (감소) 에너지·비료 원료 수송 차질	✓ 선제적 모니터링 ✓ 비축 대응 체계 구축
가격 폭등	에너지·비료 원료 단기 폭등 (2022년 이후 최고) 국제 요소 +53.7% 브렌트유 +42.2%	✓ 비축물량 적극 활용 ✓ 수입선 다변화
국내 영향	수입물가 반영 및 시차 발생 즉각 급등 (나프타, 요소) 시차 반영 (LNG, 곡물)	✓ 품목별 차별화 전략 ✓ 할당관세 적용
종합 대응	품목별 탄력적 정책 운용 필요	✓ 정책 수단 유연 활용 ✓ 위기 관리 시스템 강화

© NotebookLM

한국환경연구원

3.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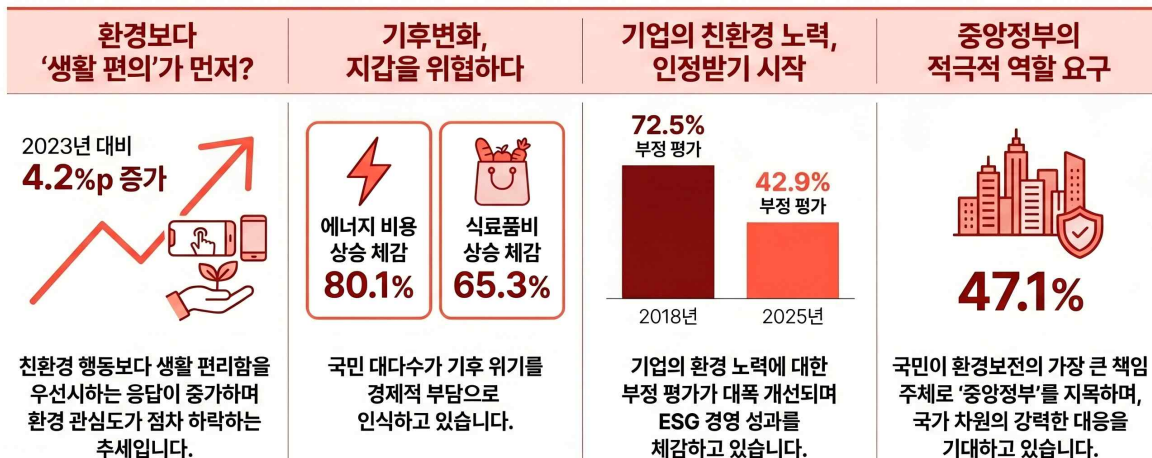


기후 위기가 가계 경제를 직접 압박하는 민생 문제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종합적인 민생·환경 정책 설계가 요구

-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환경 관심도(68.7%)와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이 완만히 감소하며 편리함을 우선하는 경향이 증가했고, 관심 영역은 유해 화학물질과 홍수 등으로 다각화됨. 또한 환경정보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응답이 3년 연속 소폭 증가함.
- 환경보전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47.1%)가 가장 높게 꼽혔으나, ESG 경영 확산과 정부의 정책적 기반 강화 노력에 힘입어 기업(42.9%)과 중앙정부(30.6%) 등 주요 주체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일제히 개선됨.
- 대다수 국민(80.6%)이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70.2%)과 식료품비(65.3%) 등 필수 생활비 지출 증가를 겪고 있어, 기후 위기가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민생 문제이자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종합 민생 대책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환경'이 '민생'이 되다

국민의 환경 인식이 추상적 가치에서 실질적인 '생활 경제'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 NotebookLM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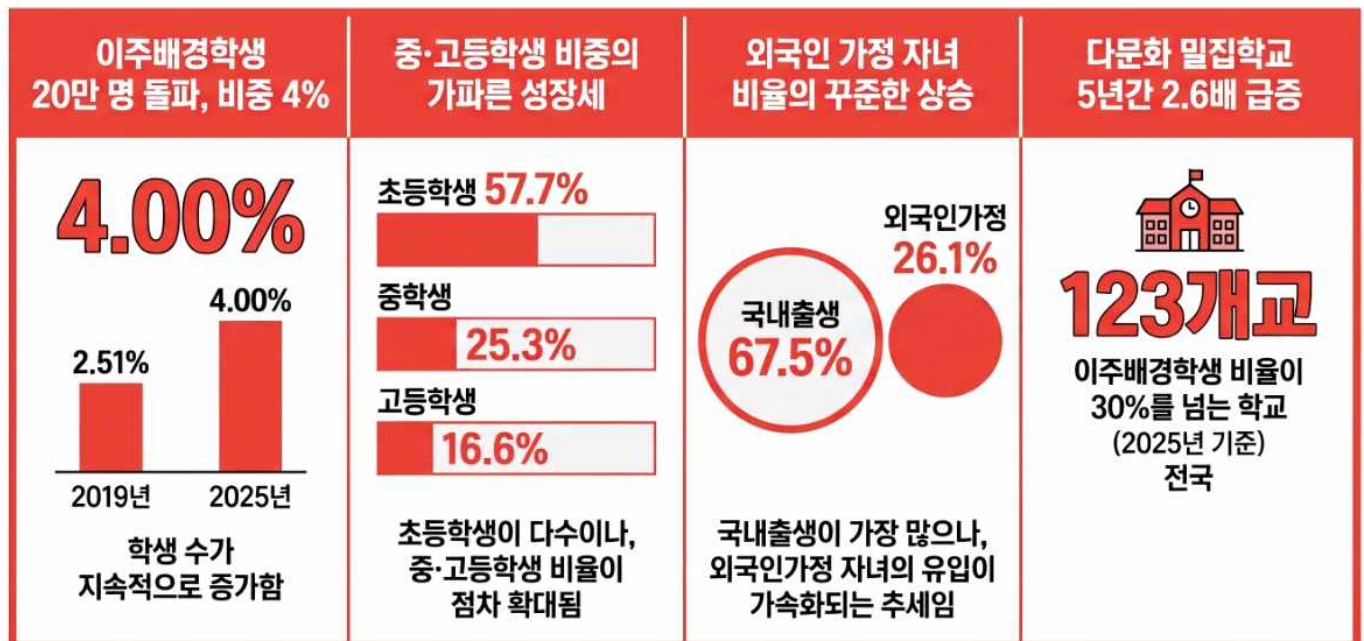
4.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한 지원체계가 구축된 만큼, 향후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와 인재 육성,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 수용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

- 2025년 이주배경학생은 202,208명(전체의 4.0%)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심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학령기가 상향되는 추세이며 특히 외국인 가정 자녀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이주배경학생 비율 30% 초과 밀집학교가 2025년 123개교로 최근 5년간 2.6배 증가하면서, 한국어 습득 및 학교 적응 저해와 일반 학생의 학교 기피 등 학교 공동화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데이터로 보는 현황] 이주배경학생 20만 명 시대의 도래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적 관심 유지)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학업 격차와 심리·정서적 취약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능적·인지적 보완 중심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외연 다변화) 한국어·교과학습 등 인지·기능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돕는 상담·정서 지원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령기 상향에 대응한 생애주기적 정책 설계 및 심화 과제 개발) 이주배경학생의 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이후 청소년 증가에 대응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 진출까지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화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결핍 중심 패러다임' 탈피 및 강점 기반의 실증적 인재 양성 모델 구축) 이주배경 학생을 단순히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결핍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언어·문화적 다양성과 잠재력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우수 학생의 성공 사례를 발굴·육성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인재 성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구조적 다문화 수용성 교육 제도화) 일회성 캠페인이나 성공 사례 홍보 중심의 다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체계적인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정책 (한계)	향후 발전 방안 (성장의 시대)
 특정 유형 편중: 지원이 쏠린 중도입국 자녀 중심. 중도입국 자녀 전체 67.5% 국내출생	 '전체' 포용: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학습 보완 중심: 한국어 및 교과 지도 위주.	 심리·정서 지원 확장: 학습의 전제 조건인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초등 중심: 초기 단계 지원에 치중.	 생애 주기별 설계: 급증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이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생애주기 모델.
 결핍 해소: 부족함을 채우는 보상적 지원.	 강점 강화 모델: 우수 인재가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강점강화 인재 양성 트랙.
 수혜자 중심: 일방향적 홍보.	 상호적 사회통합: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상호통합 .



전북 농촌지역 식품접근성 진단과 정책 대응 방향

I. 왜 주목해야 하나

- 농촌은 고령화·인구감소와 함께 유통·생활 인프라 약화, 상권 위축, 대중교통 취약, 자가용 의존, 배송·배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식품접근성 저하가 구조화 될 가능성이 큰 지역임.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전북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및 고창군 읍·면 단위에 시범 적용함.
- 이 보고서는 식품사막을 단순한 점포 부족 문제가 아니라 ①공급 기반(식료품점 분포) ②이동 여건(대중교통) ③사회경제적 취약성(고령·저소득·장애) ④이를 보완하는 지역의 제도·서비스 기반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II.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

- 문헌검토·전문가 자문을 거쳐 후보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14명 대상 델파이 조사(2회)¹⁾와 AHP분석²⁾을 통해 아래와 같이 3개 부문 12개 지표로 최종 확정함.

1) **델파이조사(Delphi Method)**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 주제에 대해 설문을 2회 이상 반복 실시하고, 이전 회차의 응답 결과를 다음 회차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의견을 재수렴함으로써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는 조사기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1차(개념·영역·세부지표·가중치 산정방식 의견수렴), 2차(1차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 재검토) 순으로 실시하여 지표의 적절성·타당성을 검증함

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 평가 대상(지표)을 상위-하위 계층 구조로 나눈 뒤, 같은 계층의 항목을 두 개씩 짝지어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쌍대비교)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 쌍대비교와 Saaty의 고유벡터법을 적용해 부문별·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응답의 논리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일관성비율(CR)이 0.1 미만인 응답만 유효 표본으로 채택함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구 분	지표 부문	세부지표
식품 접근 여건 (핵심)	공간적 접근 여건	면적당 식료품점 밀도, 인구당 식료품점 밀도, 대중교통 접근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소득층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 1인가구 비율, 등록장애인 비율
제도·서비스 기반(보조)	지역 대응 기반	식품사막 관련 조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순화·이동 판매 서비스, 지자체 반찬·도시락 사업, 공동체 기반 먹거리 지원 서비스

※ 자료: 전북연구원(2026). 「농촌 식품사막 지표체계 구축 및 적용」 표1 재구성

III. 전문가 분석 결과 :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AHP)

○ 전문가 14명 대상 쌍대비교(AHP) 분석 결과, 식품접근 여건에서

「공간적 접근 여건」(0.704)이 「사회경제적 취약성」(0.296)보다 약 2.4배 더 중요하게 평가됨

순위	부문	핵심 세부지표	복합가중 치	비고
1	공간적 접근 여건	대중교통 접근성	0.266	이동 가능성 최우선
2	공간적 접근 여건	식료품점 밀도(면적)	0.234	공간적 공백 여부
3	공간적 접근 여건	식료품점 밀도(인구)	0.203	수요 대비 공급
4	사회경제적 취약성	고령 1인가구 비율	0.129	취약성 내 1위
5	사회경제적 취약성	고령인구 비율	0.083	
6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록장애인 비율	0.049	
7	사회경제적 취약성	저소득층 비율	0.035	

※ 자료: 전북연구원(2026). 표 4-39 재구성(음영: 상위 3개 지표).

○ 특히 세부지표 중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7개 핵심지표 중 1위, 사회경제적 취약성 중에서는 고령 1인가구 비율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도출됨

IV. 전북 13개 시·군 진단 결과(전주시 제외)

○ 공급·이동 여건

- 면적당 식료품점 밀도 : 군산시(2.19), 익산시(1.44) 높음 ↔ 진안(0.17), 임실(0.20) 낮음 — 공간적 공백 우려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인구당 식료품점 밀도 : 무주(0.0061), 부안(0.0058), 진안(0.0055) 높음
↔ 익산·김제·군산 낮음 — 면적·인구 기준이 반대로 나타나는 지역 존재
- 대중교통 접근성(1일 3회 이상 버스): 평균 0.93로 대체로 양호하나 완주군(0.76)이 뚜렷하게 낮음

○ 사회경제적 취약성 상위 지역(평균·중앙값 상회)

- 고령인구 비율 : 임실(43.3%), 진안(41.8%), 고창(41.0%), 장수(40.8%)
- 고령 1인가구 비율 : 고창(23.8%), 임실(13.3%), 부안(22.8%) — 가중치 4위 지표, 우선 관리 필요
- 저소득층 비율 : 김제(14.6%), 임실(13.3%), 고창(13.0%), 정읍(12.8%)

○ 제도·서비스 기반(전반적으로 취약)

- 식품사막 관련 조례 : 13개 시·군 중 임실군만 제정, 12개 시·군 미제정
- 순화·이동 판매 서비스 : 완주·임실·정읍 등 3개 기·군만 운영, 10개 시·군 미운영
- 그냥드림코너 : 6개 시·군 운영 / 7개 시·군 미운영

○ 고창군 읍·면 단위 시범 분석

시·군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권 내부 격차가 확인됨. 고창군 내에서도 읍·면별로 식료품점 밀도·대중교통 접근성·취약계층 비율 편차가 크고, 제도·서비스 기반(푸드뱅크 등)은 고창읍에 집중되어 있어 면 지역 서비스 공백이 뚜렷함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V. 정책 시사점

① 대중교통 접근성 우선 개선

가중치 1위 지표. 대중교통 취약 생활권(특히 완주군 등)을 우선 점검하여 '1일 3회 이상 운행' 최소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필요

② 공급 기반의 이원적 접근

면적 기준(공간적 공백, 진안·장수·임실·무주)과 인구 기준(수요 대비 부족, 익산·김제·군산)을 구분하여 지역 유형별로 대응 수단을 달리 설계

③ 고령 1인가구 등 취약집단 맞춤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성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지표. 고령 1인가구 이동취약 장애인 밀집한 지역(고창·임실·부안 등)을 중심으로 지원 우선순위 설정

④ 제도적 기반 정비 : 조례 제정 확산

13개 시·군 중 12곳이 식품사막 대응 조례 미제정. 도 차원의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시·군 제정 유도 검토 필요

⑤ 이동형·체감형 서비스 확충

AHP 결과 조례보다 공동체 기반 먹거리 지원(0.298), 순회이동판매(0.255) 등 현장 체감형 서비스의 중요도가 더 높게 평가됨. 운영 지역이 소수에 그친 순회판매·반찬도시락 사업의 확대 및 예산 반영 검토

⑥ 읍·면 단위 진단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창군 사례에서 확인된 생활권 내부 격차를 전북 전체 읍·면으로 확대 진단하고, 지표 DB화를 통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VI.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 순창군 사례

- 정책 시사점 ⑤(이동형·체감형 서비스 확충)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도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음. 순창군은 2026년 4월 행정안전부·기아 공동 공모 「식품 사막화 해소 신선식품 배송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기차 2대와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함

순창군, 「식품사막화 해소 신선식품 배송사업」 공모 선정(2026.4.)

- 카고형 전기차 기반 배송체계로 행정리 단위까지 신선식품 직접 배송
- 고령층 건강관리·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생활서비스 모델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유통 기반 확충 도모

※ 자료: 뉴스핌「순창군, 신선식품 배송 공모 선정... 식품사막 해소 생활밀착형 서비스」(2026.4.22.) 보도.

- 순창군은 본 연구에서도 반찬·도시락 사업(도내 최다), 저소득층·고령인구 비율 상위 지역으로 진단된 곳으로, 이번 국비 공모 선정은 지표체계가 제시한 취약 요인(이동 여건·고령화)에 실제 정책이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기차 2대 규모의 시범사업인 만큼 도내 타 시·군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임

VII. 종합 결론

- 전북연구원의 지표체계 분석과 순창군의 실행 사례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농촌 식품사막 문제는 대중교통 등 이동 여건 개선, 고령1인가구 등 취약집단 맞춤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동형·체감형 서비스 확충이라는 세 축으로 대응해야 함

●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 순창군 사례는 국비 공모를 통한 시범 성격의 개별 사업으로, 전북 전역의 구조적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의회는 ① 순창군 사업의 성과·한계를 모니터링하여 도내 타 시·군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② 본 지표체계를 활용해 전기차 배송·순회판매 등 이동형 서비스의 우선 도입 지역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며, ③ 식품사막 대응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개별 공모사업 중심의 대응을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체계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